



보도자료(4회)

사무총장 우 인 식 변호사

연락처 : 02-599-4434

이메일 : hanbyun@hanbyun.or.kr

홈페이지: www.hanbyun.org

이산가족은 인권의 문제, 생사확인과 서신교환, 방문, 재결합을 허용하라 -한변 및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,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추진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(4회)

일 시 : 2018. 11. 27(화). 11:00

장 소 : 청와대 분수대 앞

1. 지난 8월 3년 만에 재개된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상봉인원은 100여 명에 상봉기간도 2박 3일에 불과했다. 남측 이산가족 생존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85%이고, 90세 이상도 21%를 차지하는 가운데 신청자의 1.5%에 불과한 극소수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행사였다. 그런데도 지난 9/19 평양선언은 이산가족 문제를 계속 인도적 문제로만 보고 북한의 선의와 성의에만 매달리고 있다.
2. 이산가족은 인도가 인권의 문제다. 이산가족은 근본적으로 자국에 돌아올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제16조 및 자유권규약 제23조에 의한 가족결합권을 갖고 있다. 나아가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「국내적 실태에 관한 지도지침(GPID;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)」은 이산가족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원칙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.
3. 그동안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고, 이산가족을 인도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줄 것을 왔으나 문 대통령은 계속 이를 거부한 채 지난 1일 다시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평화공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.
4. 그러나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.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, 상봉, 상호방문, 재결합이 허용돼야 한다. 더 이상 김정은의 선의에만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맡겨 둘 수 없다. 이에 우리들은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재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.

2018. 11. 26.

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,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, 성통만사, 북한전략센터, 자유북한방송, 물망초, 피랍탈북인권연대,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,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등